

마리나 산업·관광 성장 기반 강화한다

- 해수부, 「수요자 맞춤형 마리나 활성화 방안」 발표
- 관리체계 확립, 민간투자 여건 개선, 선박·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 마리나 친화적 문화 확산 등 4대 전략 10대 세부 추진 과제 마련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는 우리나라 해양레저의 한 축인 마리나 산업과 관광의 도약을 위한 ‘수요자 맞춤형 마리나 활성화 방안’을 수립하여 6월 19일(금)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했다고 밝혔다.

마리나(Marina)란 요트, 보트와 같은 마리나 선박을 정박하고 보관하는 시설과 관련 서비스를 겸비한 복합 해양레저공간을 의미한다.

최근 자연에서 즐기는 야외활동에 대한 수요가 늘면서 해외에서도 마리나 관광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나, 국내의 경우 아직 산업의 성숙도나 문화 측면에서 성장 여력이 큰 상황이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마리나 정책과 제도를 정비하고 민간투자 여건을 개선하는 한편, 선박·장비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여 해양레저 저변을 넓히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였다.

[전략 ① 마리나 관리체계 확립]

마리나 시설과 선박 등에 대한 관리체계를 체계적으로 정비한다. 전국에 산재한 마리나 관련 시설에 대한 현황 파악, 일관된 안전관리 기준 적용 등 통합적인 관리체계를 마련한다. 아울러, 마리나선박에 고유식별번호를 부여하고 선박정보를 시스템에 등록하는 ‘이력관리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한다. 이를 통해 소유주 변경 이력, 정비·사고 이력 등을 투명하게 관리하여 무단 방치와 폐선 등을 예방하고 장기적으로 마리나선박의 중개 시장 활성화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전략 ② 마리아 기반시설 확충 및 민간투자 여건 개선]

마리아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민간투자 여건을 개선한다. 먼저, 추진 중인 거점형 마리아항만 조성 사업(6개소)을 조속히 완료해 증가하는 마리아 수요에 대응한다. 또한, 마리아선박의 제조, 정비, 판매 중개 등을 지원하는 마리아 비즈센터를 중심으로 마리아 전문인력 양성, 창업 지원 등 산업 생태계를 구축한다.

아울러, 마리아항만 예정구역 외의 지역에서 추진되는 민간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사전 절차를 줄여 사업기간을 단축하는 등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전략 ③ 마리아산업 활성화 기반 강화]

해외 주요 요트 박람회에 한국관 개관과 국내기업 참가를 확대하여 국내 마리아 선박·장비 등의 해외진출을 지원한다. 또한, 국내에서 개최 중인 주요 보트쇼가 실질적인 국제 비즈니스의 장으로 자리매김하도록 해외 네트워크를 확대하여 비즈니스 기능을 강화한다. 아울러, 친환경·인공지능(AI) 마리아 선박과 관련한 연구개발(R&D) 확대 및 기술이전을 통해 국내기업의 수출경쟁력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전략 ④ 마리아 친화적 문화 조성·확산]

마리아 친화적 문화 조성 등 마리아 관광 대중화 정책을 적극 추진한다. 단순 유람 형태만 있었던 국내 마리아선박 관광상품을 체류형·체험형 상품으로 다양화하는 한편, 지역의 고유 문화·축제와 연계된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권역별 브랜딩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해양수산부가 주관하여 지방정부, 전문가와의 컨설팅 기회를 마련하고, 지방정부와 업체 간 협업을 통해 시범사업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마리나를 더욱 친숙하게 느낄 수 있도록 ‘(가칭)가고 싶은 마리나’를 선정하여 홍보하는 등 마리나 대중화에 나선다. 아울러, 섬과 어촌을 잇는 마리나 관광 콘텐츠를 개발하고, 지역문화와 해양레저를 접목한 특색있는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마리나 관광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은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마리나 관련 제도 혁신과 새로운 정책 개발에 힘쓰겠다.”라며, “앞으로 우리 경제와 생업의 터전으로서의 바다뿐만 아니라, 여유와 힐링을 제공하는 공간으로서의 바다의 가치도 높여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담당 부서	해양정책관 해양레저관광과	책임자	과 장	진재영 (051-773-5250)
		담당자	서기관	정제영 (051-773-5255)
			사무관	김대홍 (051-773-5257)



